

2022 지방선거
부천시 여성정책 제안서
부천여성주권자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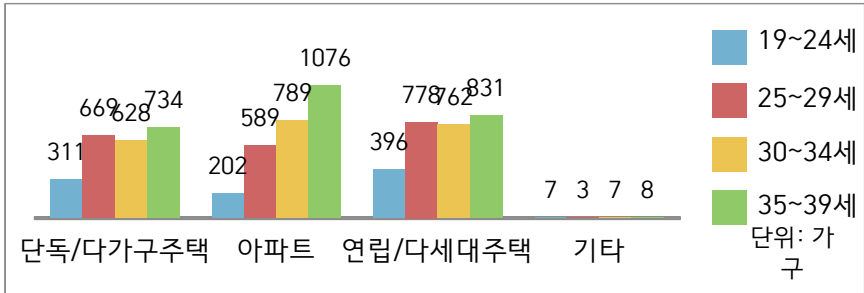
부천여성주권자행동

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YWCA/부천여성의전화/정치하는엄마들/부천새시대여성회
담장넘어네트워크/까치밥/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산학교/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현무장애인자립센터/
은가람빌/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여성주권자행동 정책제안 리스트>

구 분	제안 정책명		페이지
I. 성평등 정책	1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체계 구축	4
	2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운영	6
	3	일상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	7
	4	가족상담의 공적서비스 확대	8
II. 성평등 노동	5	청년여성이 떠나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9
	6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	10
	7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공시제	11
	8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12
III 안전·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9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현실적 보호 체계 마련	13
	10	여성 임신중단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14
	11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15
	12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공존하는 부천시	16
IV.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공공성 강화	13	36개월 미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17
	14	초등돌봄터 확대로 공적돌봄 강화	20
	15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제공	22
	16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확대로 일생활균형지원 강화	24
V. 일자리·경제	17	지속가능한 여성창업생태계 조성	25



I. 성평등 정책

정책명	1.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체계 구축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전세대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30% 이상, 1인 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49.2% 이상이다. ○ 2015년 70,236명, 2018년 77,345명, 2019년 80,228명으로 1인가구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은 세대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¹⁾ ○ 여성가구주의 경우 오피스텔,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등 불안정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비교적 물리적 치안상태가 좋은 아파트 거주 비율은 24.1%에 불과하다.²⁾ ○ 청년여성의 경우 19~24세 연령대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30~34세 연령대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 순으로 나타나며,³⁾ 노인여성의 경우는 원도심 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 청년 여성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유형 현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caption>부천시 청년 여성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유형 현황</caption> <thead> <tr> <th>주거유형</th> <th>19~24세</th> <th>25~29세</th> <th>30~34세</th> <th>35~39세</th> </tr> </thead> <tbody> <tr> <td>단독/다가구주택</td> <td>311</td> <td>669</td> <td>287</td> <td>734</td> </tr> <tr> <td>아파트</td> <td>202</td> <td>589</td> <td>789</td> <td>1076</td> </tr> <tr> <td>연립/다세대주택</td> <td>396</td> <td>778</td> <td>628</td> <td>831</td> </tr> <tr> <td>기타</td> <td>7</td> <td>3</td> <td>7</td> <td>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단위: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⁴⁾로 여성, 남성 모두 소음에 불만족(만족도 평균 3.24점)을 균열, 침하, 붕괴 등의 위험에는 대부분 만족한 결과(만족도 평균 3.97점)가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균열, 침하, 붕괴>물샘>채광>환기>실내 추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채광과 환기, 난방에 취약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치안과 물리적 안전성에 불안감이 크다. 	주거유형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단독/다가구주택	311	669	287	734	아파트	202	589	789	1076	연립/다세대주택	396	778	628	831	기타	7	3	7	8
주거유형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단독/다가구주택	311	669	287	734																						
아파트	202	589	789	1076																						
연립/다세대주택	396	778	628	831																						
기타	7	3	7	8																						

1) 부천시 성인지 통계 및 2020 부천시 기본통계
 2) 부천시 성인지 통계
 3) 2018 주거실태조사
 4)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상태가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는 주로 월세살이를 하는 문제로 주거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불편함을 해결하는 요청을 해야 하고, 부천시 주택의 42%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임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 거주 노인 세대 주거 상태 또한 물리적인 지원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돌봄과 지원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가능하도록 돌봄지원체계와 지원조례 제정 ○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지원 사업·주택수리 서비스 기사 양성 ○ '여성안심홈세트지원 -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4종 세트를 지원 ○ 심야 안전귀가 지원 공공차량 운영 ○ 저소득 1인가구 기초실태조사 시행(우울, 자살충동 등 심리정서영역 포함)

정책명	2.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운영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72%에 해당하는 미혼모·부 가정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가정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하여 주 양육자가 근로를 할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부모 가정에 함께 동거하는 경우 등본과 소득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큰 실정이다. ○ 이러한 사유로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립을 하지 않고 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대상이 증가하는 현상과 실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증가의 문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소득 기준의 완화 또는 미혼모·부자 일반가정까지 사업 참여자 기준을 확대 편성하여 유럽형 시범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일상생활 속 쉽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서는 부천시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 상담 및 서비스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발적 사업 참여자 발굴이 어려운 참여 대상임에 관내 본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배정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연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한 층 강화된 민·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참여자 기준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소득 완화 또는 미혼모·부자 가정 전체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확대를 통한 취약 가정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기능 강화(복지병 예방)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의 민,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비자발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발굴 활성화 도모 및 서비스 연계(Link)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자립 및 저출산) 향상 모도

<p>정책명</p>	<p>3. 일상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는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이후 2021년에 제2기로 재지정을 받았으며, 기존 여성친화도시 방향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 2021년에 부천시민 대상으로 성불평등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공공기관 계단표식, 화장실표식, 학교내 현수막 등에 성불평등한 표식들이 발견되었다. ○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홍보물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평등한 홍보물과 표식으로 교체하고, 주민이용시설을 보수·개선하여 시민의 성평등 의식 함양·여성친화도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p><성불평등한 홍보물 사례 및 개선제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홍보물 표식을 조사하고, 성평등한 표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지정, 역할 수행 필요 ○ 부천시 공공영역에서 제작되는 홍보물 등에 [성평등 홍보물 제작 체크리스트] 적용 의무화 ○ 다양한 여성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정기적 민관 소통구조체계] 마련

<p>정책명</p>	<p>4. 가족상담의 공적서비스 확대</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동안 부천시의 세대수와 세대당 인구를 비교해보면 세대수 인구는 꾸준히 3천여 가구가 증가한 반면 세대당 인구는 2.44명→2.32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천에서도 기존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비혼동거 가족, 청소년 부모, 미혼모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남을 시사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가족 간의 역할 혼돈, 불평등한 가족문화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 상담의 필요성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업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19년 3,638명, 20년 1,614명(코로나로 상담사업중단), 21년 2,016명에게 가족상담을 제공하였고, 그중 70%가 가족간의 문제(부부, 부모자녀, 원가족 등)로 상담을 받았다. 현재 대기자들은 평일 주간 기준 3개월, 야간 기준 6개월~1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는 상황이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사업 수요에 맞춘 상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대기기간 평균 3개월)과 민원 발생 대안 마련 - 가족 상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충 필요 - 가족 상담 전문인력 인력풀 구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존 가족 관련 서비스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의 의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Ⅱ. 성평등 노동

정책명	5. 청년여성이 떠나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90년대생 여성노동자 1,485명 실태조사(22. 4. 28)에 의하면 '일자리 혹은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다른 지역(혹은 나라)로 이동할 의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 대비 63.6%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 는 19.7%가 응답하였다. (경기도 90년대생 여성노동자 1,485명 실태조사/22,4,28) ○ 응답자들이 경험한 첫 일자리는 30인미만 사업장에 52.7%,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72.6%, 1년미만의 근무기간은 49.9%(2년미만 79.7%) 응답, 두 명 중 한 명은 30인 미만 사업장, 70%이상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근로여건의 문제로 이직했다는 응답자 75% 육박, 임금수준과 회사규모, 조직문화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저임금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에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렵다 호소한다. 청년 여성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 정부가 역할 해야 한다. ○ 청년여성노동자들에게 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지방 정부의 청년 여성 일자리 마련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문제들을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는 통합적인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입직부터 고용(경력)단절 예방까지 청년여성 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부천내 영세사업장을 직접 관리 감독 ○ 채용과정 및 비자발적 이직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과정에서 성비 공개, 채용과정의 투명성 보장 - 공공부문 일자리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관행 없애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전면 시행 ○ 보편적 청년수당, 포괄적 청년월세·청년금융지원 지원정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 모든 청년 청년수당 - 최저 보증금, 최저월세, 최저금리의 주택관련 정책 및 지원 - 최저리 생활비 혹은 신용 대출 구제를 위한 지자체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개인 회생 및 높은 금리로 인한 청년들의 빈곤 최소화 방안 마련 ○ 청년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공간 마련

정책명	6.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정부에서 일자리 혹은 노동 관련 직제를 신설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지역에서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는 전담 행정 체계가 필수이다. ○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 정부 중에서 명확하게 성평등 노동을 부서 명칭으로 걸고 있는 곳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성평등 노동팀 뿐이다. 이름은 철학을 반영한다. 명확하게 성평등 노동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신설된 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여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수동적 관리를 넘어서 성평등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 실행하는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부천시, 고용노동부 지청, 성평등 연구기관, 현장 조직, 지방 정부가 함께 하는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이 요구된다. 지역 내 성평등 노동 사안은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각자의 업무로만 주변화 된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을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와 충분한 인력·예산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성평등 노동 행정 구축 - 성평등 노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강력한 성평등 노동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노동 관계자가 모이는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 ○ 성별분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 지표를 드러낼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정책명	7.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공시제
제안 배경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이며 지방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있기도 하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 전년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구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하였다. ○ 지방정부는 지역 내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여성 일자리와 고용평등이 연계되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지방 정부의 명확한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원회 운영, 성평등 공시제 도입 등을 명시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지를 드러내어야 한다. ○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성평등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 공공기관 성평등 공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 성별임금격차 원인 분석 및 대안마련 -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발표 ○ 민간기업 성평등 공시제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용역업체, 공공조달 업체 선정 기준에 제도 포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정부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시행

<p>정책명</p>	<p>8. 중소기업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동자의 60%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에 몰려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처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고민해야 한다. ○ 부천시의 경우에도 10인미만 영세사업장 규모가 92%(2019.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가 넘는다.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성차별적 조직문화,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고착화 등은 여성노동자가 고용유지를 지속 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천시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책 공백을 찾고,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천시 영세사업장을 직접 관리 감독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충상담창구가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고충상담창구가 되어야 하는 등 지방정부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평등지원 조례 제정 및 권리구제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고용평등지원 조례 제정 ○ 영세사업장 관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부와의 협치를 통해 영세사업장 관리 감독 -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정기적인 실태조사 ○ 생활임금의 보편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공공부문 적용 범위 확대 - 지자체가 계약하는 모든 사업 운영주체에 생활임금 적용 및 민간으로의 확대 방안 마련 ○ 성평등노동 통합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의식을 위한 통합적 지원 마련

<p>정책명</p>	<p>9.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현실적 보호 체계 마련</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수사 담당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또 학교 등의 기관 내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 이러한 양상은 법은 존재하지만 2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 ○ 여성폭력의 양상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여성폭력은 일상과 밀접한 폭력으로 관점에 따라서는 여성폭력을 사소화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폭력은 결코 사소화할 수도, 사소화 되어서도 안 되는 폭력이다. ○ 여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두려움과 위험을 경찰에게 호소해야만 적극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의 개입 자체를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 따라서 피해자의 호소 없이도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관련 부천시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자체 실태조사 실시 후 이에 관한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 - 매년 발생하는 부천시 2차 피해 관련 통계 공시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매뉴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유형별 세부적인 2차 피해 관련 매뉴얼 제작 ○ 여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경찰 보호 체계 마련 ○ 경찰 수사 시 여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조치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Ⅲ. 안전·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정책명	10. 여성 임신중단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207조 제1항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세계보건기구 역시 성·재생산 건강을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한다. ○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임신중지 및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조치로는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성·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계적 특성이 강하게 작동되는 편이다. 따라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모두 중요하게 살펴져야 한다. ○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성일수록 의료 시설 이용에 대한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의료 장벽 문제를 당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확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촉매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홈페이지 성/재생산 건강(젠더기반폭력, HIV/AIDS 와 다른 성매개 감염, 피임, 모성과 신생아 건강, 임신중지, 난임, 생식기계암 등) 관련 이용시설에 대한 부천시 홈페이지 공시 - 이용시설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상담 기관 설치 ○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한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한 내용 신설 -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이용시설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 신설

<p>정책명</p>	<p>11.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또한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전국 학대피해자 쉼터는 10여개 미만이다. 여성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쉼터는 접근성 등의 이유로 통합쉼터 포함 2개소 뿐이다. 시설 이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가 관계로부터 긴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부천시내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당한 여성장애인이 즉각적이고, 안정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지지하는 공적, 사적 커뮤니티가 마련되고, 이 속에서 일상의 관계를 확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성희롱 등 피해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로 정확한 현황 조사, 외부 공개로 관련 대응체계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성폭력상담소의 여성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전담 상근 상담사 필요(장애에 대한 이해·젠더감수성 기반 상담) - 성폭력상담소에 여성장애인이 원하면 직접 상담 등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통해 접근성 향상 필요(휠체어 진입 가능 등) - 여성장애인이 폭력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쉼터(보호시설) 운영

정책명	12.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존하는 부천시
제안 배경과 필요성	<p>1. 사회적 소수자 대표성 확보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예)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등에 이주민, 장애인,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대표성 확보 노력 필요) <p>2. 이주민 출산지원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p>3. 젠더관점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공간에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이 대부분이다. 이는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차별행위에 해당됨. 비장애인화장실처럼 성별이 분리된 화장실로 개선, 설치하여 여성장애인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부천실내체육관에 있는 여성장애인 샤워실의 위치가 여성이 혼자 이용하기 무서운 후미진 곳에 있어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제보되었다. (2021년 성평등모니터링에 제보) 비장애인의 샤워실처럼 접근성이 좋고 밝은 곳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 <p>4. 학교 화장실 내 유기농생리대 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초경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보건실에 월경용품이 비치되어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보건실로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실까지 바로 가기 어렵다. 때문에 각 학교 화장실 내 유기농 생리대가 비치되어 모든 학생들의 월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p>5. 원도심 보행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개정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주변 지형여건, 지장물 등의 문제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1.5m 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음. 이때 유효폭 2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 ○ 부천시 원도심의 도보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하고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는 유아차,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 모두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원도심의 인도 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p>정책명</p>	<p>12.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존하는 부천시</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p>6.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및 확대 ○ 시민의식 함양, 공동체를 위한 공공선 추구, 사회교양교육을 통한 자율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성, 글로벌시대를 사는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민주시민교육이 제도권 교육현장을 넘어 마을 곳곳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p>
<p>정책 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6개동 마을자치회와 10개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시 사회적 소수자 할당제 시행 2. 이주민에게도 출산지원금 등 지원 3. 젠더관점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중심 장애인 이용시설 전수 조사 및 젠더관점 적용 시설 개선 4. 학교 화장실 내 유기농생리대 비치 5.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춰 원도심의 인도 정비 사업 즉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중심 인도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 - 횡단보도 앞 인도턱 낮추기 전면 실시 6.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분야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확대

IV.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명	13. 36개월 미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제안 배경과 필요성	<p>○ 이주아동이란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을 뜻한다. 2022년 3월 기준 부천시 등록외국인의 인구는 23,714명으로, 부천은 경기도에서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부천시도 '부천시 외국인아동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근거로 2020년부터 이주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이기 때문에 만 3세~5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보다 어린 36개월 미만 외국인 영유아에게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0월 기준, 경기도내 시군별 이주아동 지원 사업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역명</th> <th>구분</th> <th>사업명</th> <th>지원대상</th> <th>세부조건</th> <th>사업량 (건/명)</th> <th>지원 주기</th> <th>기간/횟수</th> <th>단가 (원)</th> <th>예산총액 (천원)</th> <th>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공약 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남양주</td> <td>교육</td> <td>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td> <td>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td> <td>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td> <td>51/63</td> <td>연간</td> <td>연간/80회기</td> <td>-</td> <td>28,325</td> <td>-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td> </tr> <tr> <td>교육</td> <td>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td> <td>- 만4세-만9세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 초등 1-6학년 중도입국자녀</td> <td>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td> <td>131/131</td> <td>연간</td> <td>8개월</td> <td>24,000</td> <td>25,200</td> <td>-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4조</td> </tr> <tr> <td>부천</td> <td>보육</td> <td>(자체) 보육료 지원</td> <td>만3-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td> <td>- 누리과정 재원생 - 부천 체류 3개월 초과 -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자 - 연초 선착순</td> <td>330명</td> <td>매월</td> <td>3-12월/10회</td> <td>240,000</td> <td>871,200</td> <td>-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 6조 제1항 6호</td> </tr> <tr> <td>수원</td> <td>보육</td> <td>보육료지원 아동 보육경비</td> <td>어린이집 체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다자녀 가정 아동</td> <td>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td> <td>1,565명</td> <td>연1회</td> <td>연1회</td> <td>현장 학습비 100,000, 일소료 (신규) 100,000</td> <td>156,500</td> <td>-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td> </tr> <tr> <td rowspan="2">시흥</td> <td>보육</td> <td>(자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td> <td>만0-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td> <td>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td> <td>925명</td> <td>월별</td> <td>매월</td> <td>50,000</td> <td>555,000</td> <td>-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1호의 4</td> </tr> <tr> <td>교육</td> <td>언어발달 지원사업</td> <td>만3-12세 아동</td> <td>다문화 ·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가족 자녀</td> <td>1,536건/40명</td> <td>상시</td> <td>1-12월/1,563회</td> <td>-</td> <td>68,484</td> <td>-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흥시 외국인주민</td> </tr> </tbody> </table>										지역명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세부조건	사업량 (건/명)	지원 주기	기간/횟수	단가 (원)	예산총액 (천원)	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공약 등)	남양주	교육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51/63	연간	연간/80회기	-	28,325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만4세-만9세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 초등 1-6학년 중도입국자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131/131	연간	8개월	24,000	25,200	-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4조	부천	보육	(자체) 보육료 지원	만3-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	- 누리과정 재원생 - 부천 체류 3개월 초과 -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자 - 연초 선착순	330명	매월	3-12월/10회	240,000	871,200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 6조 제1항 6호	수원	보육	보육료지원 아동 보육경비	어린이집 체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다자녀 가정 아동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1,565명	연1회	연1회	현장 학습비 100,000, 일소료 (신규) 100,000	156,5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	시흥	보육	(자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만0-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	925명	월별	매월	50,000	555,000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1호의 4	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만3-12세 아동	다문화 ·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가족 자녀	1,536건/40명	상시	1-12월/1,563회	-	68,484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흥시 외국인주민
	지역명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세부조건	사업량 (건/명)	지원 주기	기간/횟수	단가 (원)	예산총액 (천원)	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공약 등)																																																																										
	남양주	교육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51/63	연간	연간/80회기	-	28,325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만4세-만9세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 초등 1-6학년 중도입국자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131/131	연간	8개월	24,000	25,200	-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4조																																																																										
	부천	보육	(자체) 보육료 지원	만3-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	- 누리과정 재원생 - 부천 체류 3개월 초과 -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자 - 연초 선착순	330명	매월	3-12월/10회	240,000	871,200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 6조 제1항 6호																																																																										
	수원	보육	보육료지원 아동 보육경비	어린이집 체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다자녀 가정 아동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1,565명	연1회	연1회	현장 학습비 100,000, 일소료 (신규) 100,000	156,5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																																																																										
	시흥	보육	(자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만0-5세 외국인 등록 영유아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	925명	월별	매월	50,000	555,000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1호의 4																																																																										
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만3-12세 아동	다문화 ·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가족 자녀	1,536건/40명	상시	1-12월/1,563회	-	68,484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흥시 외국인주민																																																																											
<p>○ 그러나 이는 이주여성의 노동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이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육기관의 도움 없이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대단히 어렵고,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그 비용은 월 40~50만원 선으로, 개별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다.</p>																																																																																					

<p>정책명</p>	<p>13. 36개월 미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p>○ 이에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이주 여성의 본가, 즉 아이들의 외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분리는 아동의 정서는 물론, 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에도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p>
<p>정책 제안</p>	<p>○ 2020년 3월부터 시행중인 '이주아동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에 이어 만 36개월 이하의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료 지원 확대 ○ 장기적으로는 미등록아동에게도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실태조사 착수 및 개선 방안 마련</p>

<p>정책명</p>	<p>14. 초등돌봄터 확대로 공적돌봄 강화</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p>○ 현행 체계에서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시간 외에 별도로 돌봄 교실을 마련하여 방과 후에 초등학생에게 교육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초등돌봄교실은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4년 이전에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4년 이후 모든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다.</p> <p>○ 그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수는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임. 2018년 조사 당시 전국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36만 명으로 13.3%에 불과했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이 수치도 전체 초등학생의 19.6%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아동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모두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p> <p>○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이 방과후 주로 지내는 곳은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지냄(42.1%)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학원(37.7%)이다. - 코로나 이전인 2015년 조사에서는 학원이 60.7%, 집에서 지냄(주로 보호자 있음)이 19.0%였다.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두, 개별 가정 아니면 사설 학원이 초등 방과후 돌봄의 주요 주체가 되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II. 제4차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343</p> <p style="text-align: center;"><표 II-211>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단위: 천명,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학원</th> <th>초등돌봄교실</th> <th>지역 아동센터</th> <th>방과후 아카데미</th> <th>집에서 지냄 (주로 보호자 있음)</th> <th>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형제자매 끼리 있음)</th> <th>기타</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빈도</td> <td>838</td> <td>141</td> <td>62</td> <td>50</td> <td>935</td> <td>185</td> <td>10</td> <td>2,220</td> </tr> <tr> <td>구성비</td> <td>37.7</td> <td>6.4</td> <td>2.8</td> <td>2.2</td> <td>42.1</td> <td>8.3</td> <td>0.5</td> <td>1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표 II-212>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천명,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없음</th> <th>30분 미만</th> <th>30분 이상~1시간</th> <th>1시간 이상~2시간 미만</th> <th>2시간 이상~3시간 미만</th> <th>3시간 이상</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빈도</td> <td>1,078</td> <td>241</td> <td>180</td> <td>273</td> <td>181</td> <td>268</td> <td>2,220</td> </tr> <tr> <td>구성비</td> <td>48.5</td> <td>10.8</td> <td>8.1</td> <td>12.3</td> <td>8.1</td> <td>12.1</td> <td>100.0</td> </tr> </tbody> </table> <p>○ 또, 초등학생 중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조사해보면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2.3%, 3시간 이상이 12.1%, 30분 미만이 10.8%,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8.1%순으로 나타났다.</p>	구분	학원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집에서 지냄 (주로 보호자 있음)	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형제자매 끼리 있음)	기타	전체	빈도	838	141	62	50	935	185	10	2,220	구성비	37.7	6.4	2.8	2.2	42.1	8.3	0.5	100.0	구분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빈도	1,078	241	180	273	181	268	2,220	구성비	48.5	10.8	8.1	12.3	8.1	12.1	100.0
구분	학원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집에서 지냄 (주로 보호자 있음)	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형제자매 끼리 있음)	기타	전체																																												
빈도	838	141	62	50	935	185	10	2,220																																												
구성비	37.7	6.4	2.8	2.2	42.1	8.3	0.5	100.0																																												
구분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빈도	1,078	241	180	273	181	268	2,220																																													
구성비	48.5	10.8	8.1	12.3	8.1	12.1	100.0																																													

<p>정책명</p>	<p>14. 초등돌봄터 확대로 공적돌봄 강화</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p>○ 2021년 4월 30일 기준 지역별 공시정보에 따르면, 초등돌봄 학생 참여율은 전국 9.2%, 경기도 7.3%, 부천시 7.6% 수준임. 경기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등의 수요를 고려해 2022년 3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기존 17시에서 19시로 두 시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수는 오히려 2021년 2천963실에서 올해 2천940실로 23실 줄었다. 돌봄서비스 공급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추첨식이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불충분한 공적돌봄 체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국민건강보험공단, '17.12.), 해마다 언론에는 신학기 돌봄교실 추첨일에 희비가 엇갈리는 직장여성들의 고충이 실리고 있다.</p>
<p>정책 제안</p>	<p>○ 부천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수요에 맞게 공급 - 돌봄교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첨제가 아닌 필요한 아동 모두에게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확대</p> <p>○ 여성 고용형태 차별 없는 돌봄교실 제공 - 현재 취업중인 여성만이 아닌 재취업이나 교육 등 사회적 욕구가 있는 여성의 자녀를 위해서도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p> <p>○ 책임 있는 주체들이 협력하는 공적돌봄 체계 확립 -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주체들이 협력하여 돌봄교실을 확충,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p>

정책명	15.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제공
제안 배경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돌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은 멈출 수 없으며 돌봄 없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은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돌봄을 할 권리도 있다. 정부는 양질의 돌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 돌봄 노동은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노동이었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굳어가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공공부문의 돌봄노동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그 운영과 세부 예산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 ○ 지역 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시작된다. 지방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월급제 도입,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갑질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 돌봄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무급돌봄을 수행해 오며 따라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돌봄은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왔다. 이제는 시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권리이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재평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교육과 돌봄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 돌봄노동자 월급제 도입 및 처우 개선 - 돌봄노동자 표준 임금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관리 감독 -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 체계 마련 ○ 돌봄노동의 가치 재조명 및 돌봄노동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노동 정책 마련 - 노동인권교육과 돌봄권 교육 의무화 ○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 및 가사법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조례

<p>정책명</p>	<p>15.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제공</p>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재고 사업 추진 - 부천시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 정기적으로 분석 및 발표 ○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돌봄노동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마련

<p>정책명</p>	<p>16.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확대로 일생활균형지원 강화</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부천시 합계 출생율은 0.8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⁵⁾이고 2021년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번째⁶⁾이다. 즉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 출생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19~54세 부천 여성의 79.1% 결혼, 육아, 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⁷⁾ 직장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결혼(27.7%), 임신·출산(25.2%)이었다. 또한 19~34세 청년여성의 약14%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⁸⁾ 부천시의 19~34세 청년 여성 인구는 89,214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1,12%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18세 이하 인구 111,906명(전체인구의 약 14%), 65세 이상 인구 121,051명(전체인구의 약15%)로 아동청소년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⁹⁾ ○ 이러한 지점에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활성화와 시민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조건이 고려된 맞춤형 돌봄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길지역 등 여성시설 거점이 없는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취·창업 교육 훈련 서비스' 등 양육과 가족돌봄 중인 여성의 교육 접근성 강화, 진로 장벽 해소와 경력 이음 지원정책 강화 ○ 아동·노인 등 가족돌봄 지원이 절실한 워킹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책 강화 ○ 돌봄장벽 조건 해소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돌봄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개인과 사회의 맞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시행

5) 2019년 통계청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6)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7) 2019 부천시 사회조사

8) 2020년 여성가족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9) 2022년 3월 현재 부천시 인구 현황

V. 일자리 · 경제

정책명	17. 지속가능한 여성창업생태계 조성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통계 『2021년 경제지표』에 의하면 제조업 종사자 중 여성은 20,707(30.4%)명, 도소매 및 기타산업 종사자 중 여성이 97,055명(45.3%)으로 2018년 대비 6,000여명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취업난 환경속에 부천시민의 일자리 대책 및 취업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기업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천시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 부천지역사업분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사업체조사보고서』결과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사업체 수는 총 61,147개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로 업체 수는 734개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297,595명으로 전년대비 약 1.1% 감소, 종사자 수는 3,429명이 감소했다. ○ 부천지역 경제활동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상반기 부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여성의 경우는 50.4%로 남성보다 22.8% 낮다. 부천시는 전국과 경기도와 비교 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에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활동참가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전 국</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h style="width: 25%;">부천시</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63.7</td> <td>64.4</td> <td>61.5</td> </tr> <tr> <td>여성</td> <td>54.4</td> <td>53.5</td> <td>50.4</td> </tr> <tr> <td>남성</td> <td>73.4</td> <td>75.3</td> <td>73.2</td> </tr> </tbody> </table> ○ 부천지역 일자리 창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경제지표』에 의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23.8%)’, 남성은 ‘자동화(9.4%)’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부문으로 여성은 ‘취업 취약계층 취창업지원(13.9%)’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볼 때 30-39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52.4%)’, 20대 이하는 ‘여성 취창업 간접 지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전 국	경기도	부천시	계	63.7	64.4	61.5	여성	54.4	53.5	50.4	남성	73.4	75.3	73.2
구분	전 국	경기도	부천시														
계	63.7	64.4	61.5														
여성	54.4	53.5	50.4														
남성	73.4	75.3	73.2														

<p>정책명</p>	<p>17. 지속가능한 여성창업생태계 조성</p>
<p>제안 배경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부천기업들의 규모의 영세화, 고용자 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여성창업 활성화(예: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육성 등)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p>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인큐베이팅 센터(Co-Working Space)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초기, 또는 예비창업 여성들을 위한 Co-Working Space마련 - 예비창업여성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스페이스 확보 - 체계적인 창업역량강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도모 -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및 공동프로젝트 진행 기회 확보 ○ 여성창업자 지원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창업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 다수 -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신용평가 불리한 여성들에게 창업을 통한 경제공동체 육성(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가능하도록 초기창업자금 지원 필요